

전북 기업의 저력 확인

우범기 정무부지사, 루미컴 등 방문 현장행정 코로나19 등 위기 속 기술개발로 역량 키워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5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도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역량을 키우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을 찾아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우 부지사는 루미컴(대표 이복수), 금란산업개발(대표 은윤기) 등 2개 중소기업들을 방문해 기업동향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주식회사 루미컴은 반도체부품, 전기 조명장치 등을 생산하는 전북 대표 첨단기술 기업으로 지난 2004년 리모컨 수신모듈 제조로 사업을 시작해 2010년 이미 300만불 수출탑 달성을 경험한 규모 있는 기업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 저가 공세, 코로나19 확산 등 시대의 위기

앞에서 LED 조명, 모바일 플래시 렌즈, 보건 마스크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루미컴은 지난 2015년 전북도 선도기업 지정 이후 5년간 기술개발, 컨설팅, 판로확대 등 전북도 지원을 바탕으로 탄탄히 내실을 다져왔으며, 지난해에는 전북도 스타기업으로의 성장도 이뤄냈다.

이복수 루미컴 대표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어려운 시기에도 기술개발과 인재채용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 왔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개발과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우 부지사가 두번째로 방문한

금란산업개발은 김제시 소재의 교량구조물, 안전·조경시설물 제조기업이다. 지난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을 받고, 확장형 가드레일과 조립식 난간 관련 특허 2건을 신규 등록하는 등 기업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올해 3월에는 국토교통부의 '국토교통지역혁신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되며,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은윤기 금란산업개발 대표는 "차별화된 기술력 확보가 기업에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다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도전과 혁신을 거듭하겠다"고 말했다.

우 부지사는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전북 기업의 저력에 감동했다"면서 "전북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내실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 등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5일 도내 중소기업인 루미컴을 방문해 기업동향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SH·GH도 'LH법' 과 같은 수준으로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부동산 거래 제한 민주 한병도 의원 '지방공기업법' 대표발의

SH, GH 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에도 개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같은 수준으로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울)은 5일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직원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LH와 유사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공기업법'에는 이번 LH사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투기 근절 주요대목을 '지방공기업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내용을 관할 공직자 윤리위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위법 및 부당한 거래행위 혹은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업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활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병도 의원은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어느 기관에서든 제2의 LH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규제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깨끗한 공직사회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부가세 과세특례, 개인택시로 확대

민주 김수홍 의원 '연료 부가세 감면 조특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갑)이 개인택시 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이를 통해 감면된 세액을 과잉공급된 택시의 감차제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인택시가 사용하는 연료(LPG)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99% 감면해 이 중 90%는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5%는 감차 재원으로, 4%는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택시 업계는 유사한 특례가 없는 상황에서 감차 출연금을 부담해 왔다.

2021년 현재 국내 택시는 25만 대 이상이 운행 중인데, 5만여 대 정도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국가와 지자체의 감차예산으로는 실제 감차 보상에 턱없이 부족해 감차 실적이 저조한 형편이다.

또한,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전제적인 이동이 줄고 영업제한으로 야간 운행이 급감해 수입에 큰 타격을 입은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도 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도의회 "부동산 투기 근절 앞장설 것"

조례안 마련·투기근절 서약 예방교육·신고센터 운영 등 투기 근절 대응방안 발표

전북도의회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북도의회 부동산 투기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송지용 의장과 최영일·황영석 부의장, 김대오 운영위원장, 최찬욱 윤리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

송 의장은 "도의회는 최근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도민의 실망과 분노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지방의회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패를 원천적으로 막고, 올바른 부동산 질서 확립에 앞장서기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 부동산 관련 입법 내용에 맞춰 조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의회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교육도 빠른 시일내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도의회가 5일 '부동산 투기 대응방안'과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연 가운데, 송지용 의장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안을 자세히 검토해 관련 내용을 실천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동참하는 서약서를 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의원들은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을 방침이다.

도의회에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도의원은 물론 전북도청과 교육청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도내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송 의장은 "토지와 주택을 불법과 불공정 투기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우리사회의 기본질서를 해치고, 주거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기회에 부동산 개혁과 공직사회의 혁신을 바라는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의원 땅 투기 전수조사해야"

최영심 도의원, LH 사태 관련... "특별조사위 등 구성해야"

"도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북도의회 전·현직의원 모두를 전수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도의회는 땅 투기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또는 '조사단'을 구성하라"

도민의 합리적 의심 해소를 위해 'LH 땅 투기 사태' 관련 전북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의회 전·현직의원도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최영심(정의당 비례) 의원은 "전북도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도의회 의원들은 조사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도의회 차원에

서도 투기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강력히 실시할 것을 촉구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땅 투기 사태와 내부정보 이용을 과연 LH판 했을개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서 "현재 도의회 몇몇 의원들마저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정황들이 확인되면서 도민들의 불신은 도의회 전체로 퍼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도의원의 LH 사태와 땅 투기 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면서 "이는 발본색원하는 것이 아닌 더 큰 사태를 막기 위한임을 알아야 하며, 조사대상에 공무원은

포함되고 의원은 빠지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전주시는 17구 2주택자는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며 "의회도 이에 동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최영심 의원은 "비밀정보 활용 여부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도의회 자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외부 조사기관 또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조사단을 구성해 '계 식구 바꾸기 식 축소·소극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도내 학생 취업지원 강화

김희수 전북도의원 발의 '전북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시행
"도의 유출 막기 위해 법적 테두리 만든 것"

전북도내 학생들의 취업 지원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3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훈련 활성화와 취업 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발의·시행된 것이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전북도의회 김희수(전주6·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직업계고 고졸 취업 지원 확대와 일자리 발굴 그리고, 취업 상담을 위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례로써 지원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주요내용으로 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취업 지원 업무와 우수 취업처 발굴과 채용연계 서비스 제공이 골자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관계기관 협력체 구축, 연계 지원,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산업안전 교육 지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김이재 도의원, 서신정원 문화마을 조성 선정 환영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신동)이 2021년 전주시 마을계획 실행사업에 '서신정원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서신동의 노후 공원이거나 공간을 마을정원으로 설계하고 서신동 들레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간 교류와 여가활동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

김이재 의원은 "들레길 정비와 마을정원 조성을 통해 녹지공간이 확보되고 지역공동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민공모 우수 연구과제 시상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도민 밀착형 정책개발을 위해 실시한 '도민제안 연구과제 공모'에서 총 세편의 우수한 연구과제를 수상자로 발표했다.

먼저 우수상으로는 '남원성 북문복원을 통한 관광콘텐츠 개발 방안'을 제안한 한진석씨의 연구과제가 선정됐다.

장려상으로는 '스마트팜을 활용한 빈집문제 해결방안'을 제안한 임영수씨, 그리고 '잡채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주차정책'을 제안한 박세희씨의 연구과제가 선정됐다. /유호상 기자